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6월 29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2030 서울시청년수당 500인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1. 들어가는 말

- 서울시와 복지부의 청년수당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청년수당 논쟁이 서울시와 복지부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정작 7월, 실행을 코앞에 둔 청년수당 정책의 핵심 쟁점들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 작년 11월 서울시는 가구소득 60%이하 청년대상자들 중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선발된 3,000명에게 출처를 묻지 않고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한 해 90억. 부대비용까지 5년간 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 이에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순수 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활동 등 취업 활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원 △지원 뒤 모니터링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서울시는 가구소득 60% 이하 청년 중 창업 및 취업 준비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미취업 기간이 긴 사람과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불수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극대화 된 상황이다.
- 끝을 모르고 치솟는 청년실업률만 보더라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박원순 시장의 바람대로 고용절벽에 막힌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2030 청년 504명의 목소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2. 서울시 청년수당 설문조사 결과

- 구글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남녀 476명, 기타연령 24명, 총 50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¹⁾ 응답자 중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유예생 포함)은 282명(56.4%), 취업준비생은 71명(14.2%), 직장인은 154명(30.8%)이다.

I.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일반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찬반입장에 대한 공감 정도를 설문 한 결과,

1) 조사방법 : 구글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6년 6월 7일~6월 21일.

- 전체 응답자 500여명의 청년수당 정책의 찬반입장에 대한 공감정도를 수치화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응답자들은 선발기준이 모호하고, 수혜대상자가 3,000명으로 협소하다는 청년수당 반대 의견에 가장 크게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청년수당 정책이 연간 90억으로 예산범위가 크지 않으니 해봄직하다는 청년수당 찬성의견에 가장 공감하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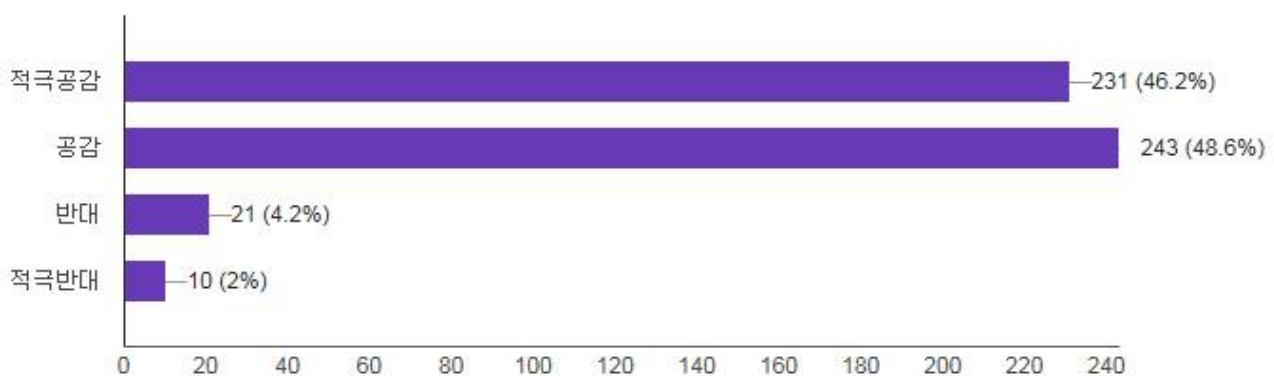
[표1. 청년수당 찬반입장 공감 정도]

	질문내용	적극 공감	공감	반대	적극 반대
반대의견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은 연간 3,000명으로 전체 대상자(50만명)의 0.6%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	218 (43.6)	201 (40.2)	47 (9.4)	41 (8.2)
찬성의견	취업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56 (11.2)	147 (29.4)	154 (30.8)	149 (29.8)
반대의견	서울시 청년들에게만 제공되는 기회로 지역차별 정책이다.	212 (42.4)	183 (36.6)	75 (15)	35 (7)
찬성의견	청년들의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72 (14.4)	194 (38.8)	130 (26)	107 (21.4)
반대의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보다는 빈곤노인, 빈곤아동, 미혼모 등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00 (40)	167 (33.4)	111 (22.2)	32 (6.4)
찬성의견	취직소요비용 등 구직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이다.	46 (9.2)	177 (35.4)	167 (33.4)	117 (23.4)
반대의견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자립의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216 (43.2)	169 (33.8)	96 (19.2)	23 (4.6)
찬성의견	서울시 자체 사업이므로 중앙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77 (15.4)	134 (26.8)	188 (37.6)	108 (21.6)
반대의견	선발 과정에서 사회활동참여의지를 보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	231 (46.2)	243 (48.6)	21 (4.2)	10 (2)
찬성의견	청년수당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23조 중 90억으로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46 (9.2)	131 (26.2)	192 (38.4)	137 (27.4)

(1) 청년수당 반대 입장에 대한 공감도

- 반대의견 중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의견은 “선발 과정에서 사회활동참여의지를 보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임. 응답자 500명 중 적극공감이 231명(46.2%), 공감이 243명(48.6%)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474명(94.8%)에 달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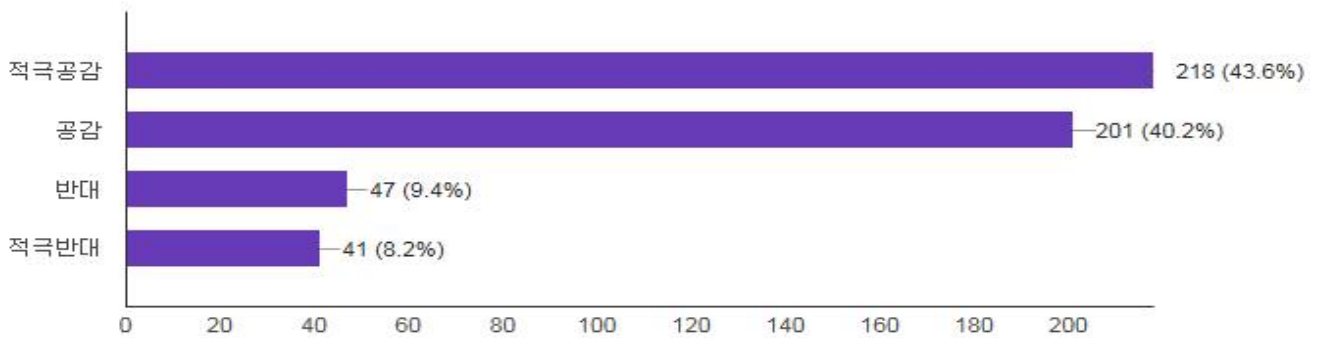
[질문1. 선발과정에서 사회활동참여의지를 보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



2) 각 질문별 중복투표가 가능해 전체 응답자 수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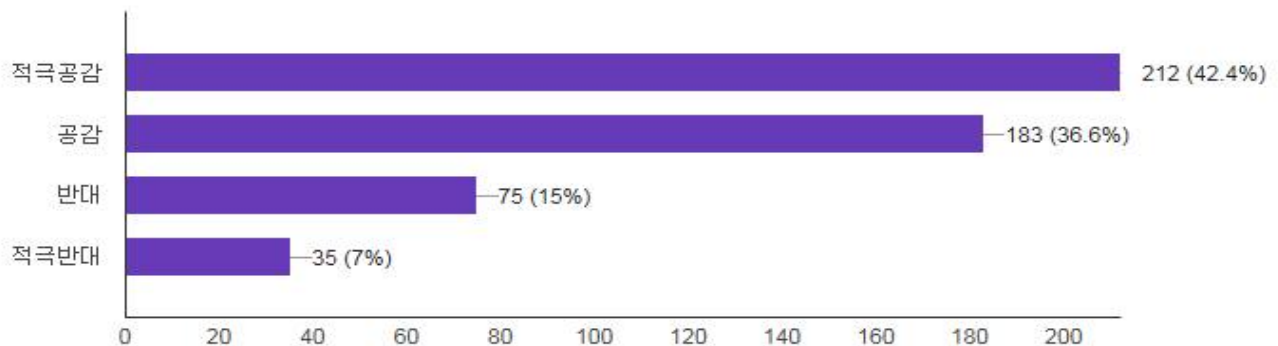
- 2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반대의견은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은 연간 3,000명으로 전체 대상자 (50만명)의 0.6%에 불과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임. 전체 응답자 500명 중 419명(83.8%)이 공감했으며, 88명(17.6%)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질문2.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은 연간 3,000명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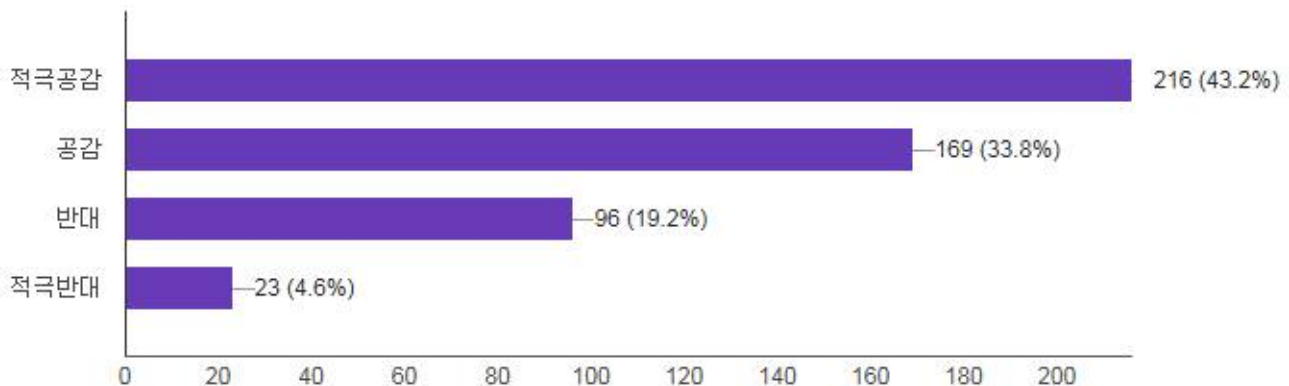
- 3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반대의견은 “서울시 청년들에게만 제공되는 기회로 지역차별 정책이다”라는 의견임. 공감한다는 의견이 395명(79%)이며, 반대의견이 110명(22%)으로 나타남.

[질문3. 서울시 청년들에게만 제공되는 기회로 지역차별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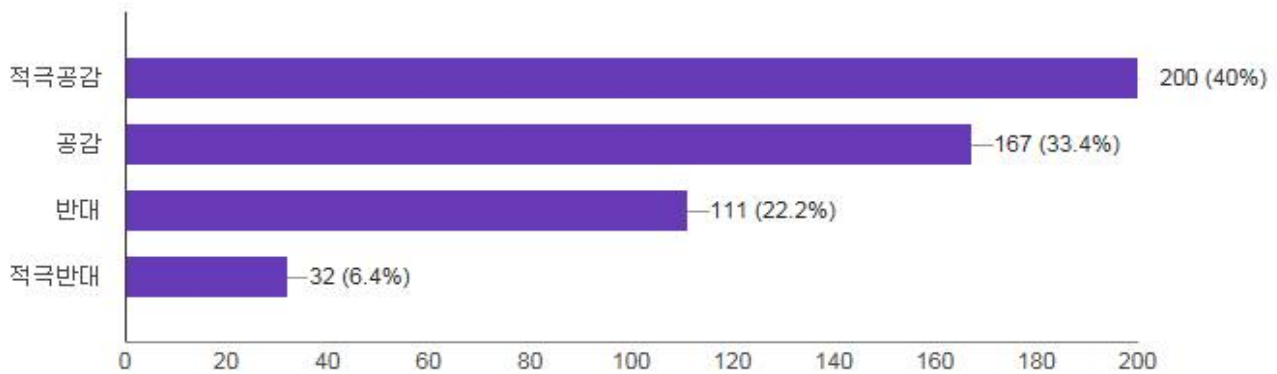
- 4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반대의견은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자립의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전체 응답자 중 총 385명(77%)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119명(23.8%)이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질문4.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자립의지 떨어뜨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반대의견 중 가장 공감도가 낮은 의견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보다는 빈곤노인, 빈곤아동, 미혼모 등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그래도 전체 응답자 중 상당수인 367명(73.4%)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143명(28.6%)이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질문5.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보다는 빈곤노인,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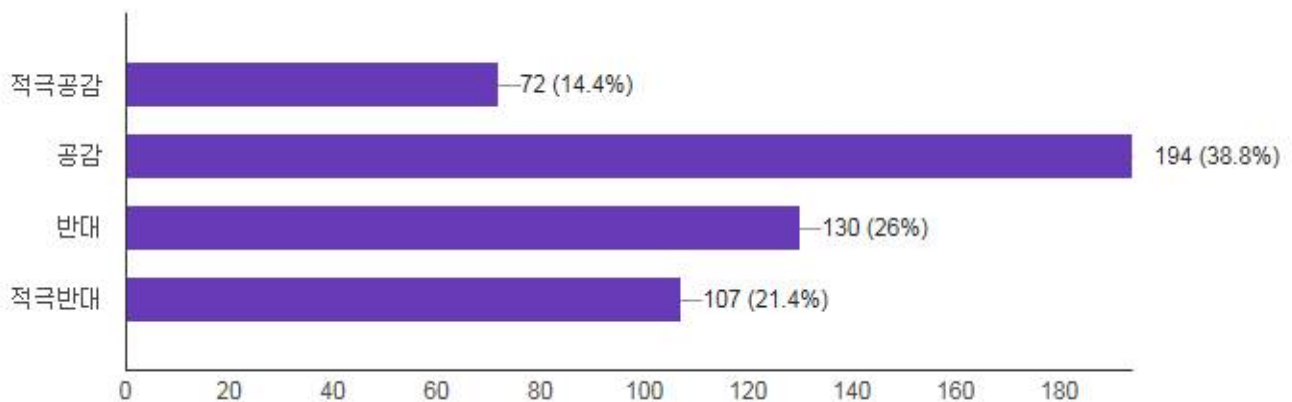


- 전체응답자 500명 중 70-80%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청년수당정책의 반대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하였음. 가장 많은 공감의견을 받은 반대의견인 선발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측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선발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70% 이상의 공감을 받은 나머지 반대의견들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 지역차별적 요소,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청년보다는 다른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2) 청년수당 찬성 입장에 대한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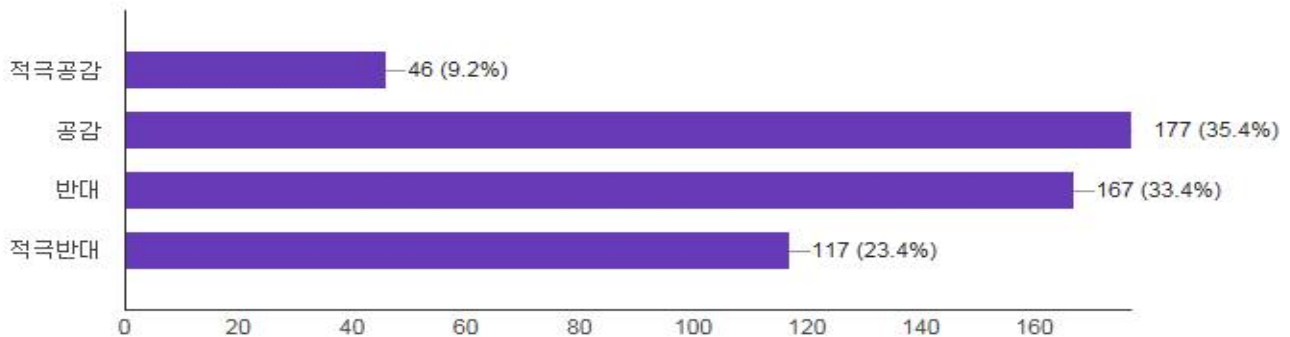
- 찬성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은 “청년들의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임. 전체 응답자 중 266명(53.2%)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237명(47.4%)이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공감6. 청년들의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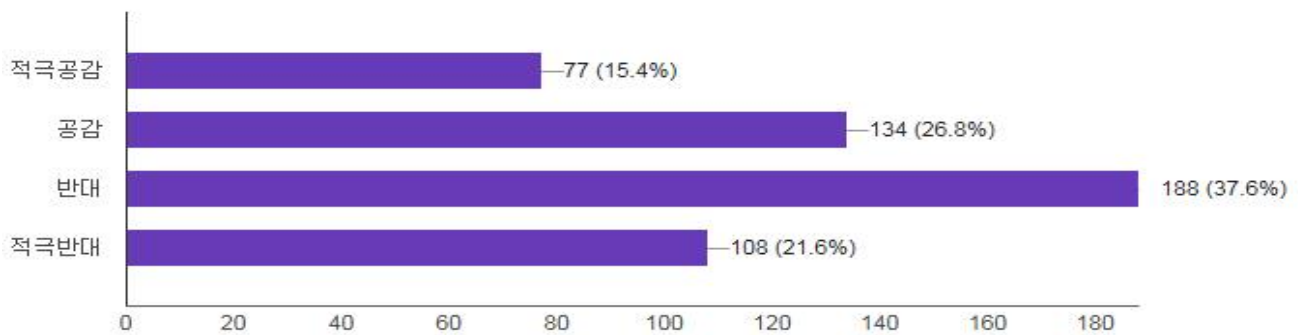
- 찬성의견 중 2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은 “취직소요비용 등 구직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이다”임. 전체 응답자 중 223명(44.6%)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284명(56.8%)이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공감7. 취직소요비용 등 구직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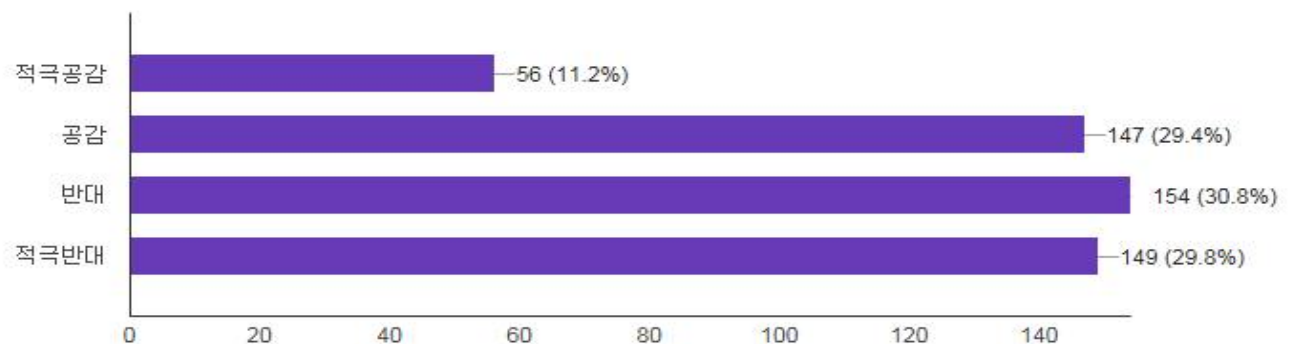
- 찬성의견 중 3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은 “서울시 자체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임. 전체 응답자 중 221명(42.2%)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296명(59.2%)이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공감8. 서울시 자체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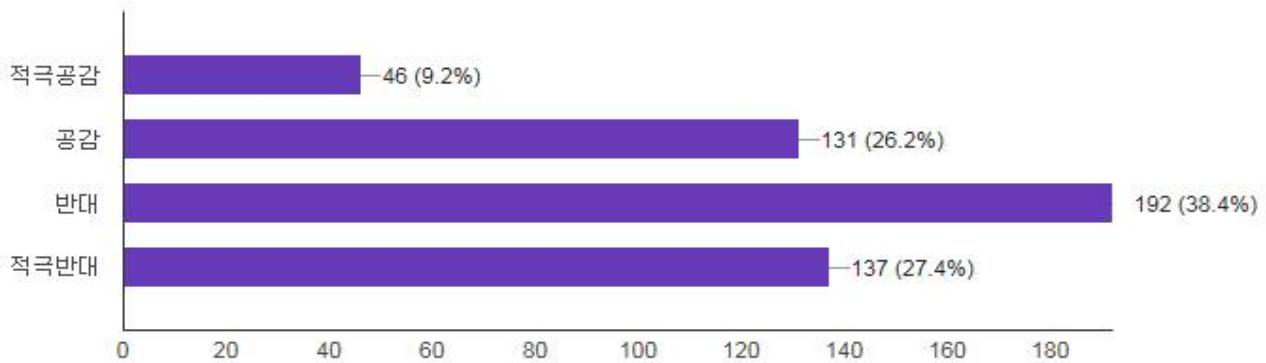
- 찬성의견 중 4번째로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은 “취업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임. 전체 응답자의 60.6%인 303명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40.6%인 203명이 공감한다고 답하였음.

[공감9. 취업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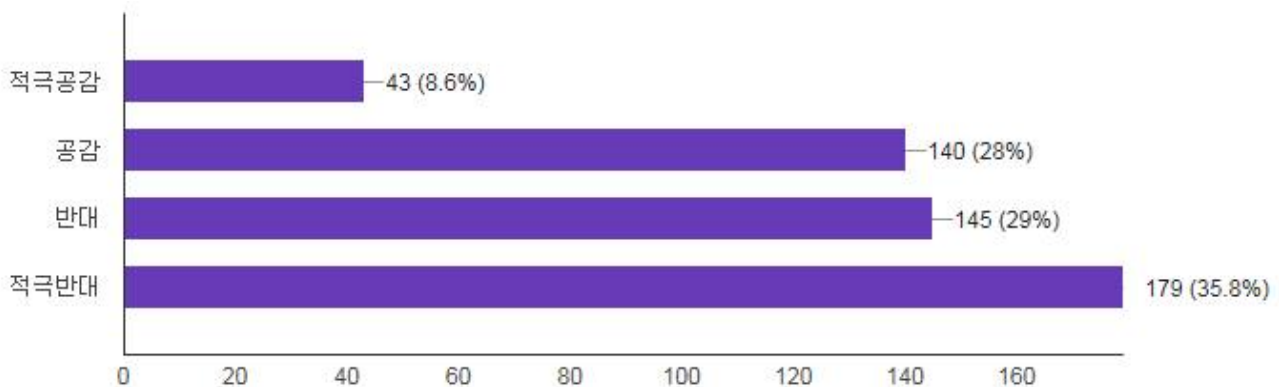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가장 공감도가 낮은 의견은 “청년수당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23조 중 90억으로,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임. 공감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35.4%인 177명이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5.8%인 329명임.

[공감10. 청년수당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23조 중 90억으로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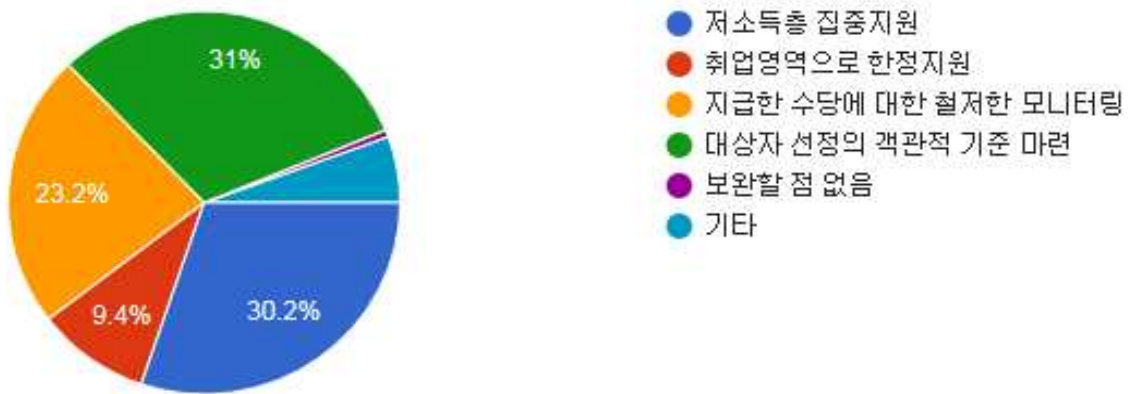
- 청년수당 정책에 관한 5개 찬성의견 모두 과반 이상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수당 예산 90억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가장 큰 반대를 나타냄. 또한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층의 사다리가 되어 줄 것이라는 의견에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나타내어 청년수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냄. 중앙정부(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인 59.2%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 결과적으로 청년수당에 ‘찬성한다’ 는 의견은 183명(36.6%)이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24명(64.8%)으로 나타남.

[그래서, 당신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Ⅱ.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보완점

-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7월에 강행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이 31%, 저소득층 집중지원이 30.2%, 지급한 수당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23.2%, 취업영역으로 한정지원이 9.4%로 나타남.



Ⅲ. 가장 긴급한 청년정책

-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5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주거문제 해결 등 보편적 청년안전망 마련’이 19.8%, ‘교육개선(진로 컨설팅, 직업훈련 등)’이 13%, ‘저소득층 청년 집중지원’이 8.8%로 뒤를 이음. 반면,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라고 답한 의견은 4.4%에 불과하였음.



3. 맺는말

-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예정대로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이 기존 중앙정부 사업들과 유사/중복되어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사업의 지속가능성 불확실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지난 2015년 11월 6일 네이트(nate.com)에서 시행한 청년수당 찬반투표에서는 전체 참여인원 16,648명 중 “자립의지↓...일자리부터”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14,290명(86%), “사회 밖 청년 지원 활성화”를 이유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233명(13%)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준생'에 청년수당 월 50만원...당신의 의견은?



기사링크 : http://comm.news.nate.com/nateq?poll_sq=22238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수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과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라고 답하였으며, 19.8%가 보편적 청년안전망 마련이라고 답한 반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90억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